

# 안보개념의 경합성과 왜곡: 탈냉전시대의 개념 확대에 대한 평가

민 병 원 |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은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어떤 이론적 의미를 지니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학자들은 안보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경고해왔다. 그리하여 과연 “안보”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안보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그 고유의 의미가 원래 의미하는 바로부터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둘째로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경합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러한 두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곧 오늘날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과연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개념의 확대와 그 부작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 그리고 개념이 본질적으로 경합적인가에 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가 갖는 사회과학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탈냉전 시기의 안보개념 확대는 무리한 개념 왜곡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우리는 전통적인 카테고리인 방사형 카테고리의 모델을 상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개념의 수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불명확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탈냉전기의 확대된 안보개념으로 인하여 안보개념 자체에 본질적인 경합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 역시 개념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사형 카테고리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우리는 보편적 개념의 핵심내용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개념의 서로 다른 속성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가 특정한 사회현상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탈냉전기 안보개념, 코펜하겐 학파, 개념의 확대, 외연, 내포, 경합성, 추상성의 사다리, 방사형 카테고리

## I. 들어가는 말

데탕뜨 시기 이후 국제정치경제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현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술과 경제교류의 확대로 말미암아 무역 및 환경, 자원문제 등에서 복잡한 영향력 관계가 나타나면서 어느 한 나라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민감성과 취약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게 되었다(Keohane and Nye, 1977).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급속하게 전개된 탈냉전 현상은 안보관념 자체의 존립에 더욱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게 되었다. 초강대국의 대결구도와 양극화체제가 완화되면서 “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념이 불분명해졌고, 여기에 더하여 군사적으로는 단극화가, 경제적으로는 다극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안보” 개념 자체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21세기에 들어와 가속화되고 있는 네트워크 현상은 당구공 모델과는 다른 모습의 안보개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국지전의 양상과 테러전, 그리고 지역 안보공동체의 움직임 등의 사례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안보개념의 확대”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탐구이다.

냉전시대에는 대부분의 안보연구가 전장에서의 승리를 위한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주로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으며, 기타 방법들은 단지 이러한 목표를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도덕이나 복지, 비폭력 저항 등 군사영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러 이슈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냉전시기의 전략연구에 있어서 핵심 개념들, 예를 들어 억지, 제한전, 군비통제 등과 같은 개념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철저하게 반영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개념들이 곧 국가와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서 간주되고 있었다(Bull, 1968: 597-601).

1970년대 이후에 본격화된 새로운 안보논의들은 냉전시대의 좁은 안보개념을 탈피하여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안보개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곧 과거의 좁은 의미의 “전략연구”로부터 보다 확대된 “안보연구”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나아가 이러한 안보연구에 다시 다양한 비(非)군사영역들이 포함되면서 안보연구 역시 광범위한 “국제관계연구”의 일환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다시 말해 안보연구의 위상 자체가 전략연구로부터 보다 확대된 형태의 국제관계연구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특히 유럽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랫동안 초강대국의 대결구도 속에서 안보문제를 고민해온 유럽의 학자들은 탈냉전기에 새롭게 제기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이론틀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덴마크의 분쟁 및 평화연구소(COPRI)를 중심으로 시작된 코펜하겐 학파는 유럽에서 시작된 평화운동과 국내정치적 변화, 동·서독 관계의 변화 등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관념의 재정립을 모색하였고, 그 중요한 일부가 바로 “안보개념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은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어떤 이론적 의미를 지니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평가는 탈냉전 시기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안보” 개념의 여러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론적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즉 전통적 안보개념이 국가행위자 중심의, 그리고 군사영역 중심의 고정된 개념이었던 반면, 확대된 안보개념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는 까닭에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거나 이론적 속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안보”라는 개념에 다양한 행위자와 위협의 원천, 나아가 안보담론의 모습까지 담아냄으로써 정작 안보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쉽사리 답하기 곤란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 안보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경고해왔다. 그리하여 과연 “안보”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이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안보개념을 확대함으로써 그 고유의 의미가 원래 의도하는 바로부터 “왜곡”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선 코펜하겐 학파 뿐 아니라 많은 이론가들은 안보개념이 다양하고 복잡한 탈냉전기 국제정치의 속성을 담아내야 한다고 보았다(Nye and Lynn-Jones 1988; Mathews 1989; Crawford 1991; Haftendorn 1991). 이에 대해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고하면서 국가 중심의 군사적 안보관념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Gray 1992; Chipman 1992; Walt 1991).<sup>1</sup> 이러한 이론적 논쟁의 와중에서 코펜하겐 학파의 개념 확대 작업은 과연 전통적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념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일까?

둘째로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경합적(contested)”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오랫동안 이론의 다양성에 익숙해져온 사회과학자들은 개념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상대주의적 현상으로 이해해왔다(Baldwin 1997). 즉,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개념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갈등요인은 상존하는 것이므로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과연 사회과학적 개념의 이러한 “경합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통합된 개념을 지향해야 하는 것일까? 또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개념이 바뀌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두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은 곧 오늘날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과연 국제정치이론의 맥락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개념의 “왜곡”과 “경합성”이라는 두 개념 모두 이론적 개념의 재정립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중요한 오류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퍼즐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

1. 한편 비판이론 등 더욱 급진적인 시각에서는 오히려 코펜하겐 학파를 뛰어넘어 더욱 포괄적인 안보이론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Stritzel 2007).

피즐 1: 개념의 확대가 안보의 속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가?

피즐 2: 안보개념은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경합적”일 수밖에 없는가?

## II. 기존 연구동향과 개념적 한계

### 1. 코펜하겐학과와 탈냉전기 안보담론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는 코펜하겐 학파, 특히 배리 부잔(Barry Buzan)과 오울 위버(Ole Waever)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 전 세계적인 확대 안보담론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부잔은 탈냉전 안보이론에서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대비되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보대상(referent objects)의 다양화”와 “안보영역(sectors)의 확대”, 그리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안보가 사회적 담론을 통한 행동양식이라고 보는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라고 할 수 있다. 부잔과 위버가 각각 현실주의와 비판이론으로 기본 정향을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안보이론을 넘어서는 확대된 안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시각은 공유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코펜하겐 학파의 새로운 안보이론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는, 탈냉전시대에 들어와 국가뿐만 아니라 하부단위체나 초국가적 단위체를 모두 망라하는 다양한 대상들이 안보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의 전통적 안보기능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가가 개인이나 국내사회에 오히려 위협을 가하는 역기능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제3세계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안보와 관

2. 부잔과 위버의 안보이론이 각각 특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부잔의 경우 현실주의적 입장에 가깝지만, 위버의 이론은 “정체성(identity)”의 형성을 통한 안보관념의 발달을 강조한다(Waever 1995; Waever 199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이론 전반을 소개하기보다는 안보개념의 확대가 갖는 이론적, 방법론적 의미를 논하는데 치중하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넓은 범위 안에서 “코펜하겐 학파”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련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모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 확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적용되는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군사영역, 특히 전략적 이해관계가 걸린 분야에서만 안보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탈냉전시대에는 이러한 영역이 대단히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개념도 여기에 맞추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글로벌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호의존 추세의 강화로 정책과 사회적 선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 위협 대신에 국내사회적 위협요인들이 더욱 부각되면서 내부의 “취약성(vulnerabilities)”을 감소시키는 것이 안보의 주된 목표가 되었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다. 또한 냉전시대의 전략적 안보개념이 보다 복합적인 국제관계이론으로 통합되면서 안보에 대한 연구 자체가 학제적으로 폭넓게 확산된 것도 광의의 안보개념이 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Buzan, 1991: 368-374).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 관념은 확대된 안보개념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인식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안보”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담론의 형성 속에서 만들어진다. 즉 현존하는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안보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보문제화”의 과정 속에는 안보의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포함되는데, 안보주체는 현존하는 위협의 대상, 즉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안보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한다. 안보의 대상이 안보의 주체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 속에는 대상과 주체를 모두 포괄하는 동적 메커니즘이 담겨 있는 것이다. 안보문제화의 과정을 중시하는 “확대된 안보개념”은 우선 “위협”에 대한 인식 또는 “위기”의 설정 과정이 단순한 객관적 또는 주관적 차원을 넘어 행위주체들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결국 확대된 안보담론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드라마처럼 부각되고 그럼으로써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간주된다. 사회적 이슈를 하나의 “안보” 이슈로 부각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

엘리트들은 사회 전체에 걸쳐 예외적이고 집중적인 동원체제 또는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Buzan, 1997: 14).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코펜하겐 학파의 기본 입장은 원래 현실주의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론이 발전하면서 점차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울어지게 된다. 특히 과거 유럽의 평화연구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비판이론의 영향을 받아 주류 안보담론의 체계모니 구조를 해체(deconstruct)하고 현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지배관계를 바꾸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판이론의 안보이론 역시 “정치적” 속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해체하여 도덕적으로 더 나은 대안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다(Eriksson, 1999). 이와 같은 비판이론은 국제정치이론에서 구성주의가 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 양자는 모두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같은 주류 이론에 대항하여 제3의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이들의 안보이론은 항상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즉 가치가 개입된 실천이론으로서의 성격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이 전통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폭넓은 모습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바로 코펜하겐 학파가 이러한 비판이론과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2. 탈냉전기 안보담론의 개념적 한계

하지만 비판이론과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구성”의 메커니즘으로 안보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양자 간에 차이를 보인다. 우선 비판이론의 경우 안보를 사회적 구성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하며 기존의 정상적인 사회현상을 중단시키고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려 한다(Krause, 1998; Krause and Williams, 1996). 하지만 구성주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기존 질서를 안정적인 관행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이론보다는 덜 급진적인 성향을 보인다. 코펜하겐 학파는 이런 점에서는 비판이론보다 구성주의

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Buzan, 1997: 19-20). 하지만 이로 인하여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이 이미 서구중심적인 편향성에 오염되어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잔의 초기 안보논의에서는 세계가 “미숙한(immature) 무정부상태”로부터 “성숙한(mature) 무정부상태”로 진행된다는 진화론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다(Buzan, 1991: 178-181). 이것은 서구의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편견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가 지역적 우열성이라는 개념적 한계에 노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이 “안보문제화”라고 하는 구성주의적 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이스만(Huysmans)은 확대된 안보개념 내에 “규범적 딜레마(normative dilemma)”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안보담론은 위협을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적 이슈들을 언급하는 행위만으로 선입견이나 사전 판단을 공론화시키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민자 문제와 마약 문제를 연계시켜 안보 이슈로 삼을 경우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과는 상관없이 안보담론 자체는 이미 이민자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만다(Huysmans, 2002: 4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안보위협을 물신화하려는 성향, 즉 규범적 딜레마가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구성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안보의 “탈(脫)자연화(denaturalization)” 방법을 통하여 헤게모니의 담론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되었고, 그 이외의 담론들이 이러한 지배관계 속으로 편입되었는가를 밝힘으로써 안보문제화의 한계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것이 바로 구성주의자들의 임무라고 여기는 것이다(Huysmans, 2002: 49-53).

이와 더불어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 확대는 지나치게 구성주의의 인식론에 집착하게 되면서 “관찰할 수 없는(unobservable)” 개념 또는 “측정할 수 없는(unmeasurable)” 개념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등한시한 채 이론적 논의에만 몰두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인식론적으로 지나치게 주관적인



성향을 띠게 되면서 여타 안보 패러다임과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탈냉전시대의 “위협” 개념은 주관적 인식에 의한 “구성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는 외부의 위협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다. 특히 “위협”이나 “안보”의 개념이 하나의 “화행(話行, speech-act)”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개념의 실체보다는 그것이 엘리트들에 의해 조작되는 정치적 과정을 더 중시하고 있다. 만약 안보문제의 국내정치적 속성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결국 안보개념의 확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안보의 핵심 속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Knudsen, 2001: 360).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인식론이 오히려 현실주의와 같은 주류 이론의 합리주의, 실증주의 전통과 수렴해가고 있다는 점이다(Wendt, 1995; Farrell, 2002; Checkel, 1998; Hopf, 1998).<sup>3</sup> 이와 관련하여 안보개념의 확대 또는 안보의 구성주의적 이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확대된 안보개념은 코펜하겐 학파와 구성주의의 존재론적 입장을 반영하여 탈냉전시대의 안보담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기는 했지만, 21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세계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세계의 구조적 “관”이 점점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추세와, 그것이 안보문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과거의 국제정치가 영토국가 또는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당구공 모델로 설명되었다면, 오늘날의 세계 정치는 국가 뿐 아니라 다양한 초국가행위자 및 국가 하부단위체들 사이의 복잡한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Rosenau, 1990; Rosenau, 2003). 세계화의 추세로 인하여 기존 국가들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국가의 통제력과 권

3. 구성주의가 유럽적 맥락에서 발달한 비판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웬트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식 사회과학의 전통을 흡수하면서 원래의 비판이론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서사적 요소보다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중시하는 방법론의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 심지어 정체성의 상징으로서의 기능마저도 대폭 축소되어왔다. 대신에 다양한 단위체들 사이의 이합집산 현상들은 더욱 심해져 이제 이들 사이의 연결망을 살펴보지 않고서는 세계정치의 모습을 그려보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정치 구조를 네트워크로 이해해야 할 당위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네트워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론의 차원을 넘어 실제 세계정치의 “판” 속으로 잠식해 들어오는 존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확대된 안보개념은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모습까지도 담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Barabási, 2002; Buchanan, 2003; Watts, 2004).

21세기의 복잡한 세계화와 네트워크화의 추세는 국제정치의 변화와 더불어 안보딜레마의 속성도 변하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의 안보딜레마를 “전통적 안보딜레마”로, 그리고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안보문제를 “신(新)안보딜레마”로 구분함으로써 네트워크화의 진행에 따른 안보문제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Cerny, 2000: 626-627). 신안보딜레마는 바로 안보 자체가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점차 분리재의 속성을 띠게 되면서 구성원들이 항의(voice)나 충성(loyalty)과 같은 전통적 참여방식보다는 이탈(exit)의 대안을 선호하는 새로운 유형의 딜레마를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시스템 쇠퇴의 초기 증상으로서 안보연구에 있어 새롭게 다루어야 할 주요 어젠다가 되고 있다(Hirschman, 1978). 또한 오늘날 네트워크화의 추세와 더불어 새롭게 제기되는 안보이슈로서 “위험사회”의 관념을 들 수 있다. 사회학자인 울리히 벡(Ulrich Beck)에 의해 제기된 이 이론에서는 과거의 계급기반사회에서 산업사회가 출현했고, 오늘날 네트워크시대에는 이것이 다시 “위험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Beck, 1992; Beck, 2002). 위험사회론은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보다 한발 더 나아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위험”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네트워크시대의 안보개념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 관련 논의들은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이 기존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선도적 사례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초기 논의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확대된 안보개념의 이론적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 III. 개념의 왜곡과 경합성: 이론적 틀

#### 1. 개념의 왜곡

안보개념의 확대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안보개념의 확대가 안보의 본질적인 측면을 벗어남으로써 적실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중요시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개념의 확대(conceptual stretching)”라는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념을 제시했던 지오반니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특정한 개념이 확대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변질되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였다. 물론 세상이 복잡해지고 넓어지면서 그것을 묘사하는 개념도 확대되곤 하는데, 이러한 개념 확대의 과정은 그 경험적 기반과 우리가 의도하는 보편성 사이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관행이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러한 간극의 문제가 단순한 “정도(degree)”의 문제라고 치부되어왔다. 즉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개념의 적용범위를 적당한 선에서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했다. 하지만 복잡성의 정도가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는 양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kind)”로 귀결된다. 이 경우에도 단순한 개념 연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에서 많은 연구들은 계량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계량화의 수준은 풍부한 데이터와 정교한 모형에도 불구하고 항상 질적 연구작업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언어적 표현과 논리적 사고가 계량화와 측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량화와 측정은 항상 그 전 단계에서 변수의 개념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개념의 형성은 양적 관계를 측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개념이 그 안에 점점 더 많은 내용을 담게 될수록 그것이 전달하려는 의미는 더욱

모호해지고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말하자면 개념의 “변별력(discriminating power)”이 줄어들게 된다(Sartori, 1970: 1038-1039). 연구방법론에서 말하는 개념의 “타당성(validity)”은 바로 이러한 의미 전달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하나의 개념이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사실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카테고리과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어야만 한다.<sup>4</sup>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은 대부분 경험적 관찰보다는 이론으로부터 추출된다. 그렇지 않은 개념들은 직접적인 관찰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로부터 우리는 개념의 “외연(extension)”과 “내포(intension)”를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개념의 “외연”은 그것이 적용되는 사물의 유형을 가리키는 반면, “내포”는 그 개념이 적용되는 사물의 속성들을 총칭한다. 다시 말해 전자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바를 가리키지만, 후자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포함된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지칭하는 바가 넓어지면서 내부적으로 함축하는 의미가 축소될 경우 “추상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Sartori, 1970: 1043-1044). 반면 외연이 좁고 내포가 넓은 경우 “구체적 개념”이 된다. 대부분의 이론적 개념은 이처럼 “외연”과 “내포”의 스펙트럼 상에 위치한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은 바로 안보대상의 다양화와 안보영역 확대라는 “외연”을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사르트리가 이야기한 “추상성의 사다리(ladder of abstraction)”를 올라가려는 노력이다. 다음 그림 1은 안보개념의 확대가 추상성의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준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고도로 추상적인 개념이, 바닥에는 경험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사르트리에 따르면, 이러한 추상성의 사다리를 오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념의 속성을 줄임으로써 보다 “보편적(general)”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두 번째의 방법은 바로 “개념 확대”인데, 개념의

4. 사르트리는 이러한 개념문제를 계량화 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계량화 작업은 어디까지나 개념화를 먼저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암소가 검게 보이는 헤겔(Hegel)의 밤”에만 개념 확대가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만큼 개념 확대가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은 크다(Sartori, 1970: 1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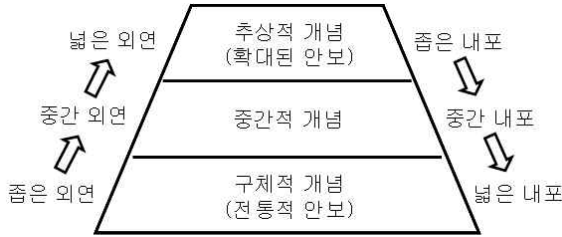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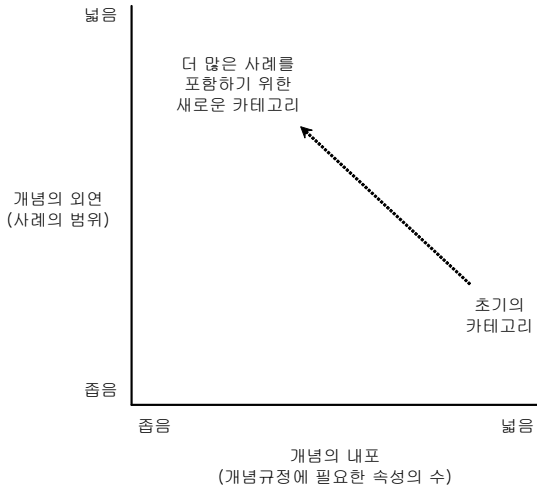


그림 1. 추상성의 사다리

내포를 줄이지 않은 채 외연만을 넓히는 방법이다. 즉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의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개념이 갖는 속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개념 대신 허구적이고 모호한 개념화로 귀결될 따름이다. 이러한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추상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에는 공통의 보편성을, 내려올 때에는 구체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artori, 1970: 1040-1041).

결국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는 보다 다양한 안보대상과 확대된 안보영역을 포함하는 거시적 개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성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 안보개념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더욱 넓은 현상을 지칭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동시에 개념의 “내포” 즉 대상의 속성에 대한 규정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보다 많은 현상이 “안보”로 언급되지만 그럼으로써 개념들 사이에 핵심 속성이 적게 공유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적 변형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르토리가 지적했듯이 “이론적 원칙에 충실한(disciplined)” 변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연”만 확장하고 “내포”의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개념적 왜곡”을 낳게 되고 만다. 이처럼 개념의 이론적 의미의 변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상성의 사다리 속에서 중간적 입장을 차지하는 다른 수준의 개념들과도 체계적인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개념의 외연을 확장할 때마다 함축적 의미가 변질되지 않는 일정한 범위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개념이 원래 의미하려는 속성이 변화한다. 개념의 확대와 관련하여 흔히 두 가지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는 개념의 외연이 좁아지고 내포가 증가할수록 세



출처: Collier and Mahon 1993, 846.

그림 2. 사르트르의 “추상성의 사다리” 그림

분화된 카테고리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둘째는 개념의 외연이 넓어지고 내포가 제한될수록 보편적인 카테고리의 수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처럼 개념의 외연과 내포, 그리고 세분화된 카테고리과 보편적인 카테고리의 관계에서 역(逆)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컬어 “역변이(inverse variation)의 법칙”이라고 부른다(Collier and Mahon, 1993: 846). 위의 그림 2에서는 이러한 역변이 관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초기의 개념이 담아내려는 의미에 더하여 보다 많은 변이 사례들이 나타날 경우 우리는 추상성의 사다리를 오르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개념의 내포를 좁히고 외연을 늘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개념 규정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부정(negation)에 의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에 의하지 않은(without negation) 규정”이다. 부정에 의해 규정된 개념은 현실세계에 직접 적용되거나 아니면 적용되지 않거나 두 경우의 한 가지로 귀착된다. 따라서 부정에 의한 개념은 항상 무엇인가를 명확한(determinate) 상태로 지칭한다. 이에 비해 부정에 의하지 않은 개념 규정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다.<sup>5</sup> 부정에 의하지 않은 개념 규정에 의존할 경우 이론적인 기반이 약해지게 되고, 이는 다시 모호한 이론을 낳는다. 이러한 사르토리의 논의는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추상성의 사다리 밑부분에서 우리는 내포를 최대화하고 외연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황과 맥락에 근거한 개념 규정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역적 개념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카테고리기가 확대되면서, 즉 추상성의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우리는 개념의 내포를 줄이고 외연을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보편적 개념을 지향할 경우 이론적 차별성을 분명하게 규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사르토리의 권고이다. 개념이 보편화될수록 그것을 떠받치는 이론적 요소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경험적으로 현실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부정에 의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현실에 접목시키는 데 있어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념 확대”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확대는 개념의 외연을 늘리기만 함으로써 결국 그 개념이 의도해오던 함축적인 의미를 대단히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곤 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상 개념의 “왜곡(distortion)”을 낳게 된다. 이러한 오류에 대한 해법은 추상성의 사다리에서 개념의 외연과 내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중간적 카테고리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상황적 맥락만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부정(negation)의 차별성은 개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추상성의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구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설명력을 갖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거시 이론과 경험적 테스트 모두에 강한 개념을 만들어야만 한다.<sup>6</sup>

5. 사르토리는 부정에 의해 규정된 개념을 “경험적 보편자(empirical universals)”로, 그리고 부정에 의하지 않은 개념을 “유사 보편자(pseudo-universals)”로 정의하고 있다 (Sartori, 1970: 1042).

6. 이 점과 관련하여 사르토리의 권고는 중립적이면서도 분명하다. 지나치게 이론적 엄밀성만을 추구하려는 “무모한(overconscious)” 사고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무관심한(unconscious)” 사고방식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 2. 개념의 경합성

본 연구에서 다룰 두 번째 내용은 확대된 안보개념이 그 속성상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충돌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곤란한 경합적 개념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문제는 이미 부잔의 초기 저작 속에서도 분명하게 인지되고 있다. 그는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에서 비롯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안보개념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이하 ECC로 약칭)”이라고 못 박고 있다(Buzan, 1991: 14). 이러한 선언을 통해 부잔은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른 복잡성과 모호성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즉 안보의 개념을 자신들의 주장과 같이 확대된 형태로 재구성할 경우 부득이하게 그 안에 포함될 상충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개념의 설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에 관한 논의들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 이론적 다원성과 개념의 상대성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CC는 원래 “어떠한 개념이든지 그것의 적절한 사용을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는 갤리(W. B. Gallie)의 철학에서 유래한다(Gallie, 1956). 어떤 이론적 개념이 함축(내포)하고 있는 핵심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규정이 모두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ECC에 담겨 있는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개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이미 지닌 상태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 내용에 있어서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론 논쟁은 다양한 대안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하는 “이상형”의 모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끊임없는 담론을 통해서 개념이 정립되어간다고 본다. 이러한 대항 개념들 사이의 “경합성”이야말로 우리의 지식을 풍부하게

---

그만큼 이론과 경험의 요소를 모두 갖춘 개념이 오늘날 사회과학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개념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주는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ECC 자체가 개념의 상대주의에만 집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개념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문제와 “핵심 내용(core meaning)에 대한 공동의 평가”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경합성”이라는 관념 속에는 “공동의 의미를 찾아가는 담론”에 대한 필요성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객관적 핵심”이 존재한다고 전제함으로써 이론적 경직성과 개념의 비타협적 규정이라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Gray, 1977; MacIntyre, 1973; Swanton, 1985).

갤리(Walter Gallie)는 ECC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논쟁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Gallie, 1956: 169). 이러한 규정은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거듭 인용되어왔지만, 사회과학 내부에서는 자칫 진리 상대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다. 모든 개념이 불가피하게 논쟁을 유발한다면 과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엄밀하게 과학적인 개념 규정이 곤란하다고 하여 개념이 완전하게 주관적인 적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극단적인 입장에 대비하여 우리는 제3의 시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3의 시각에서는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일정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갤리의 ECC 개념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갤리에 따르면, ECC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1) 개념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한다, (2)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개념 사이에 어느 특정 개념이 올바른 것으로, 또는 표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ECC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개념의 적절한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논쟁이 존재한다, (4) 이러한 논쟁이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주장은 경청할만한 내용과 증거를 가지고 있다(Gallie, 1956: 169). 이러한 ECC는 개념을 구성하는 내부 요소들 사이에 복잡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개념이 모호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ECC는 개념의 “의미” 자체보다는 그것의 “적절한 사용(proper use)”을 둘러싼 논쟁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겔리의 이러한 ECC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사회과학에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명확한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사회과학의 수많은 개념들을 ECC라 치부할 경우 의미 있는 사회과학의 담론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ECC의 관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겔리가 원래 강조했던 ECC의 특성은 그 적절한 사용에 있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매우 유사한 개념 사이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간주함으로써 학문의 진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개념 자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혀내야만 유사 개념들 사이에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의 정도를 가늠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경합적 개념을 사용하는데 있어 일정 수준의 합의가 가능하다는 사회과학적 발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들 사이의 경합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거를 위해 우리는 겔리가 언급했던 또 다른 관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상호 경합적 개념(mutually contested concepts: MCC)”인데, 개념의 차이에 대한 합의 불가능한 ECC와 달리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동일한 개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즉 ECC의 경우에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보지만, MCC의 경우에는 개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단지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다양한 혼동과 논쟁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결은 바로 “표준사용법(standard general use)”에 대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Gallie, 1956: 169-186).

표준사용법의 개념은 특정한 개념이 지닌 다양한 특징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지닌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다(Smith, 2002: 334-335). 다만 민주주의가 지닌 여러 측면들의 일부만을 부각시킬 경우 동일한 개념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개념 본래의 차이라기보다도 사용 환경이나 맥락과 연관

된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원칙적으로 의미하는 바, 즉 “표준사용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이 지닌 다양한 속성들이 사용자에게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동시에 인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의 개념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 단지 개념 사용자들이 강조하는 모든 속성들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개체(object)”를 구성하며, 우리가 서로 경합적이라고 보는 다양한 개념들은 이러한 개체의 특수한 부분만을 강조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동일한 개체의 다차원적인 모습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mith, 2002: 337-338). 다음 그림 3은 전통적인 개념과 ECC의 기본구조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부잔이 안보를 하나의 ECC라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위버(Ole Waever)의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에서부터였다. 안보문제화는 사회적 이슈가 하나의 안보문제로 부각되는 담론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경합하면서 특정한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해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힘의 관계, 즉 권력의 헤게모니가 작동하게 된다는 점은 비판이론과 구성주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안보개념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위협을 인지하고 동원체제를 공인하는 일종의 “화행(speech-act)”라는 것이 확대된 안보개념을 주장하는 코펜하겐 학파의 주장이다. 따라서 안보개념이 곧 ECC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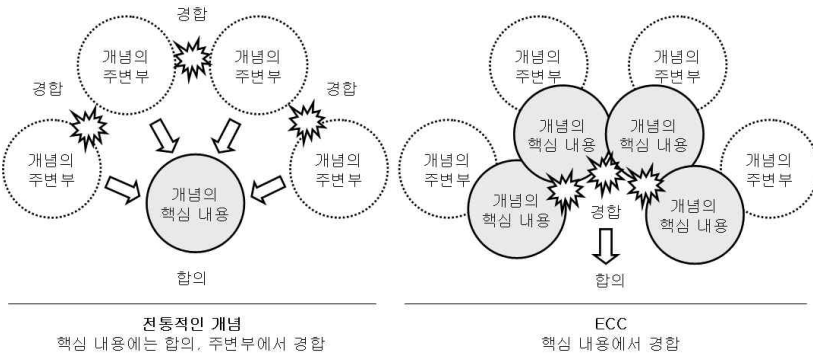


그림 3. 전통적인 개념과 ECC

하지만 이렇게 핵심 내용에 대한 경합성, 즉 개념적 상대성을 강조하게 될 경우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개념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르토리의 “추상성의 사다리” 비유는 제쳐놓더라도, 개념 자체가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에 의해 상대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론은 지나친 학문적 비관론 또는 불가지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론적 공론화와 그것을 통한 이론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잔이나 코펜하겐 학파의 입장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데이비드 볼드윈(David Baldwin)은 안보개념이 ECC의 기본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ECC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ECC가 기본적으로 가치에 대한 판단을 동반하는 “평가적(appraisive)”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국가마다 서로 다른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생겨날 수밖에 없는 안보개념의 차이를 과연 제대로 비교,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한다(Baldwin, 1997: 10-11).

### 3. 개념의 확대에 대한 새로운 모델

한편 사르토리의 “추상성의 사다리” 개념이 사회과학연구에 있어 개념의 오용과 왜곡의 위험성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사르토리가 주장한 해법이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기는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개념들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념의 외연 확대를 둘러싼 논쟁들이 쉽사리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회과학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엄밀한 개념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 왜곡” 문제와 “ECC”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방사형 카테고리의 관념을 살펴보고, 이것이 탈냉전 시대의 안보개념 확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현상을 기술하는데 이용되는 대부분의 개념은 “추상성의 사다리”에서 전제로 하는 명확한 경계선을 갖지 못한다. 사회과학에서의 개념들은 여러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democracy)”라는 개념이 추상성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위치한다고 보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종류의 민주주의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나 “대중민주주의(mass democracy)”와 같은 개념들은 사다리의 중간 또는 아랫부분에 해당할 것이다.

더 나아가 1970년대 한국의 유신정권에서 제창했던 “한국적 민주주의”의 개념은 사다리 꼭대기의 보편적 민주주의 개념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의미를 담은 매우 특수한 민주주의를 기술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 심할 경우 이러한 개념은 아예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하위의 개념이 그보다 상위에 속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추상성의 사다리가 갖는 위계질서에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상위의 속성들을 포함하는가, 아닌가의 단순한 가부(可否) 문제로 귀결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상위 개념들이 지닌 속성을 포함한 상태에서 개념의 수준이 매우 불명확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과학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유사개념 및 불명확한 개념을 무수히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르트리가 제안한 “추상성의 사다리”라는 엄밀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만약 사르트리의 사다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념의 왜곡 현상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콜리어(David Collier)와 마흔(James E. Mahon, Jr.)이 제안하는 해법은 좀 더 복잡한 도구들을 동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개념들은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르트리처럼 엄격하게 분리된 카테고리의 관념을 도입하기 어렵다.<sup>7</sup> 심할

7. 콜리어와 마흔의 개념은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 개념은 고전 카테고리과 달리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단일 속성이 존재하지 않

경우에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속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00가지 유형의 민주주의 체제 사이에 공유된 특질이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버려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리어와 마흔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유사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보다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일정한 속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즉 카테고리의 구분이 가부(可否)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程度)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카테고리 간의 경계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강조할 경우 우리는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속성들(attributes)의 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콜리어와 마흔에 따르면 고전적 카테고리에서 벗어난 사례로 방사형(radial) 카테고리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카테고리의 전체 의미가 “핵심(central)” 하위 카테고리(subcategory)에 담겨 있지만 추가적인 사례를 기술할 경우 그로부터 일정한 속성을 배제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핵심 카테고리는 하나의 원형(prototype), 즉 최선의 사례로서 해당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속성을 다 갖춘 경우를 말한다. 그 외의 추가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원형사례의 일부만을 가진 것으로서, 핵심사례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음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카테고리가 상위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위계질서형의 개념적 연결망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방사형 카테고리는 핵심 개념이 1차적 카테고리가 되어 여러 방향으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별모양의 연결망을 특징으로 한다.

고전적 카테고리와 방사형 카테고리의 속성들은 이처럼 어떤 개념을 1차적인 카테고리로 삼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위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전적 모델의 경우에는 상위(superordinate) 카테고리를 1차적 카테고리로 삼은 후에 하위(subordinate) 카테고리의 속성들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그림의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념 1”이 속성 A, B, C를 보유한 1차적

---

을 수 있다고 본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속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Wittgenstein(196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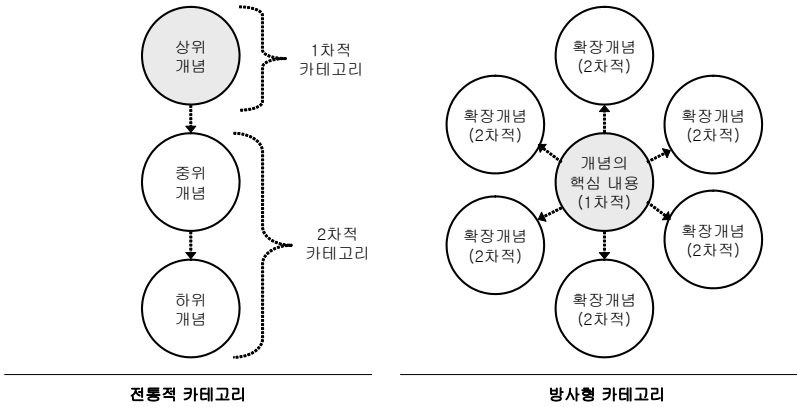


그림 4. 전통적 카테고리 와 방사형 카테고리: 개념의 층위

|          | 속성   |   |   |   |   |   |
|----------|------|---|---|---|---|---|
| 1차적 카테고리 | 개념 1 | A | B | C |   |   |
| 2차적 카테고리 | 개념 2 | A | B | C | D |   |
|          | 개념 3 | A | B | C |   | E |
|          | 개념 4 | A | B | C |   | F |

|          | 속성   |   |   |   |   |   |   |
|----------|------|---|---|---|---|---|---|
| 1차적 카테고리 | 개념 1 | A | B | C | D | E | F |
| 2차적 카테고리 | 개념 2 | A | B | C | D |   |   |
|          | 개념 3 | A | B | C |   | E |   |
|          | 개념 4 | A | B | C |   |   | F |

전통적 카테고리 와 방사형 카테고리

출처: Collier and Mahon 1993, 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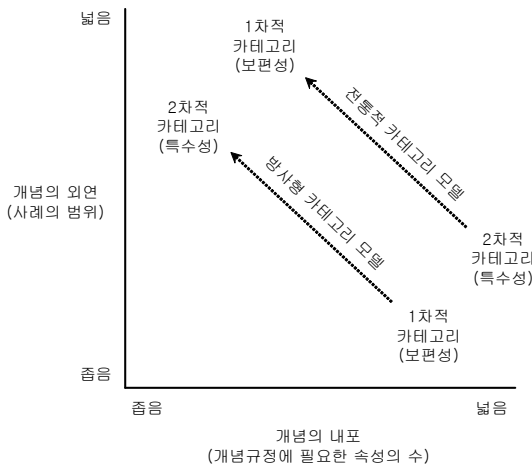
그림 5. 전통적 카테고리 와 방사형 카테고리: 개념의 속성

카테고리로 제시된 후에 추가적인 속성 D, E, F를 덧붙임으로써 한층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2,” “개념 3,” “개념 4” 등을 만들어 낸다. 이에 비해 방사형 모델의 경우에는 모든 속성들을 포괄하는 핵심 카테고리를 1차적인 카테고리로 삼은 후에 이를 분할하여 다양한 주변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된다.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면 모든 속성을 지닌 “개념 1”이 하나의 원형(prototype)으로 제시된 후에 그것의 일부 속성만을 공유하는 “개념 2,” “개념 3,” “개념 4” 등의 추가적 개념들이 만들어진다. 결국 방사형 모델의 경우에는 핵심 내용으로부터 특수한 요소들만 부분적으로 부각시

키는 역(逆)의 선택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전적 모델의 경우에는 “추상성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특수한 개념이 보편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반면, 방사형 모델의 경우에는 보편적 개념이 특수한 개념으로 좁혀진다. 이러한 두 가지 모델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특정한 개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념 왜곡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보편성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성을 줄이고 특수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념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그림 6은 이처럼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면, 방사형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2차적 카테고리가 더 넓은 외연을 갖는다. 다시 말해 보편적 개념으로부터 특수한 개념으로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개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보다 많은 사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곧 하나의 개념으로 더 많은 사례를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1차적 카테고리에 형용사를 추가함으로써 개념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다. 결국 방사형 카테고리의 개념은 사회적 현상을 묘사하는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출처: Collier and Mahon 1993, 851.

그림 6. 전통적 카테고리 와 방사형 카테고리의 외연과 내포



일어날 수 있는 개념 왜곡의 문제가 반드시 보편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필요는 없음을 말해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역의 과정, 즉 특수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더욱 많은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새로운 카테고리 모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IV.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 분석과 평가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논의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 개념의 외연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1) 안보대상의 다양화, (2) 안보영역의 확대, 그리고 (3) 안보문제화. 이러한 속성은 전통적 안보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재규정될 수 있는 기초적인 담론을 구성해왔으며, 오늘날 비국가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안보문제의 정치화 등 다양한 파생적 개념이 등장하는 단초를 마련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난 10~20년간의 안보담론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특히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반격도 만만찮게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안보”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 속성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는 국가 중심, 군사적 영역, 그리고 위계질서적 이슈화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Baldwin, 1996).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념 왜곡 및 ECC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논쟁에 대해 개념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논문의 초반부에서 두 가지의 퍼즐을 제시했는데, 우선 “퍼즐 1”에서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 확대가 개념의 왜곡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퍼즐에 대한 해답은 문제를 어떻게 프레임(framing)하는가에 달려 있다. 먼저 사르트리의 고전적 카테고리의 틀을 단순하게 원용할 경우 우리는 안보개념의 그러한 확대, 즉 3가지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확대는 개념의 왜곡(stretching)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안보” 개념의 뜻에 대한 재조정 없이 보다 많은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의 내포를 그대로

둔 채 외연을 무리하게 확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콜리어와 마흔이 제시한 방사형 모델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정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선 “안보”의 개념이 담고 있는 내포, 즉 기본적인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전통적인 안보개념은 (1) 군사적 영역, (2) 국가 중심, 그리고 (3) 전략적 고려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은 (1) 군사를 포함하여 환경,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영역의 공존, (2)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비국가기구, 개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공존, 그리고 (3) 안보이슈의 사회적 형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3가지의 기준에 따라 전통적 안보개념과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구분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확대된 안보개념은 원래의 개념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안보개념의 속성을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 선별하는가에 달려 있다.

고전적 카테고리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우선 안보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요소를 “생존(survival)”이라고 규정할 경우, 나머지 요소들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은 이에 따라 “생존 + 국가행위자 + 군사영역 + 전략”이라는 공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방사형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생존 + 다양한 행위자 + 다양한 영역 + 안보문제화”라는 공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양한 행위자”에는 국가행위자가 포함되며, “다양한 영역”에는 군사영역이 포함되므로 “국가 + 비국가행위자” 및 “군사영역 + 비군사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안보문제화”의 속성은 안보문제가 형성되는 사회적 합의형성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전략” 개념과는 상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략개념은 대부분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안보문제화는 이러한 합리적 요소 대신에 정치적 협상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 및 사회적 이합집산과정을 상정한다. 그림 7과 그림 8은 두 가지 카테고리에 따른 안보개념의 속성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위의 두 그림을 살펴보면, 결국 안보개념의 확대는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택하는가에 따라 개념의 무리한 왜곡이 있었는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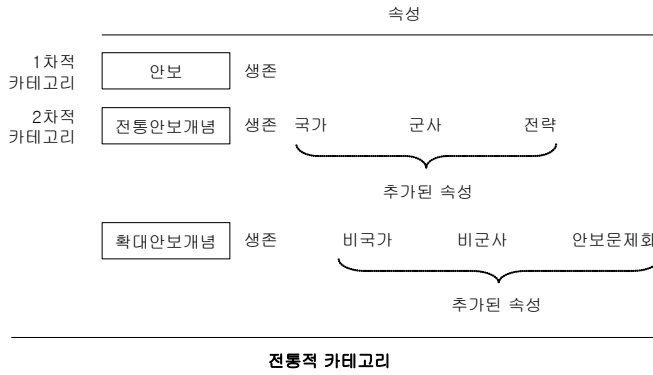


그림 7. 고전적 카테고리에 따른 안보개념의 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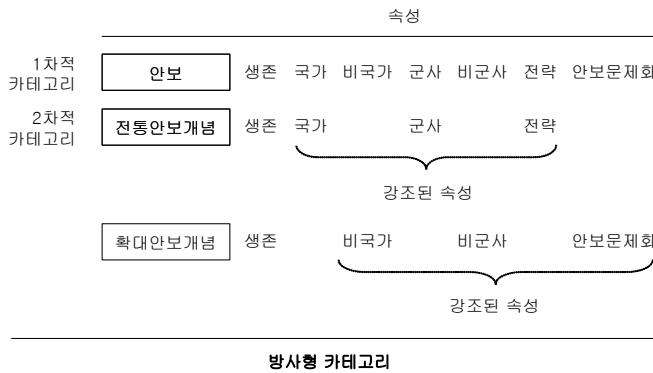


그림 8. 방사형 카테고리에 따른 안보개념의 속성

을 알 수 있다. 그림 7을 보면, 먼저 전통적 카테고리에 따를 경우 우리는 “안보”의 가장 포괄적인 요소로서 “생존”에 관련된 사항을 꼽게 된다. 코펜하겐 학파가 강조했던 점도 바로 이것이다. 비록 국가, 군사영역, 전략적 관점에서의 전통안보개념은 쇠퇴했지만, 새로운 시기의 안보현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경우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라는 개념의 확대를 통해 탈냉전기의 시대적 변화상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사르트리가 언급했던 “추상성의 사다리”를 오름으로써 개념의 왜곡현상

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럴 경우 사다리의 각 단계마다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가 동시에 섞여 있는 경우 이것이 전통적 안보개념에 속하는지 아니면 확대된 안보개념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계선이 불분명할 경우 우리는 사르토리의 개념 사다리를 적용하기 힘든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과학에서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

그렇다면 그림 8에서와 같은 방사형 카테고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어떨까? 여기에서는 아예 “안보” 개념을 애초부터 확대된 것으로 설정한다. 안보를 규정하는 핵심요소의 수를 늘림으로써, 즉 “내포”를 넓힘으로써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보다 구체적인 사안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내포 속성들 중에서 일부만을 추려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안보개념도 그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확대된 안보개념도 그 일부로서 간주된다.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가는 연구자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사고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이와 같은 카테고리 모델은 상대적인 인식론적 입장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속성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개념의 외연과 내포가 얼마나 넓혀지고 좁혀지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여간 방사형 카테고리 모델을 채택할 경우 우리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개념 확대가 전통적 카테고리 모델에 견주어 한층 더 대등한 지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두 가지 개념 모두 보편적 개념의 하부구조로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안보개념이 상위개념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전통적 카테고리 모델에 비해 양자간에 보다 대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문제는 남는다. 왜냐 하면 방사형 카테고리의 모델에서도 고전적 카테고리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전제조건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안보의 핵심적인 속성을 어떻게 함의하는가에 따라 이러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진다. 누가, 어떻게 함의하는가가 개념의 적실성과 왜곡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조건은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인식론적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진리의 객관성을 믿는 입장 또는 실증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제조건이 엄격하게 규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해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누가 사회의 담론체계를 장악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중에서 어떤 입장을 택하는가에 따라 개념의 적실성에 대한 논의 역시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ECC에 관련된 두 번째 퍼즐에 대한 해답도 이러한 맥락에서 탐구할 수 있다. 켈리가 언급했던 ECC의 기준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 개념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하고 표준적인 의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념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과 더불어 각각의 입장에 경청할만한 논거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분명 “안보”의 개념이 ECC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보의 “본질적(essential)”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논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상 안보의 본질적 속성은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안보의 개념이 ECC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지나치게 보편적인 개념의 경우에만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사르토리가 언급했던 추상성의 사다리 맨 위쪽에 위치하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모호한 개념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개념들은 구체적인 현실을 지칭하는 속성이 미흡한 까닭에 대표적인 속성을 정하는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다면 사다리의 맨 위에 위치한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안보” 개념은 어떨까?

안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학자들에 의해 독점되어왔지만, 그것이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면 우리는 그러한 독점을 영구히 지속시킬 필요는 없다. 국가행위자나 군사영역을 넘어서는 생존의 위협이 오늘날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황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안보의 핵심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양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상호경합적 개념(MCC)” 이론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일한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속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펜하겐 학과가 의도했던 바는 바로 이런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생존”이라는 핵심

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았지만, 안보의 기타 속성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개념의 사용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탈냉전기의 확대된 안보개념이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경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점은 그것이 사용되는 시대적, 상황적 환경이 어떻게 규정되는가의 여부이며, 나아가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 이러한 개념들의 변화를 평가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다음 그림 9는 이러한 관계를 재 정리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카테고리 모델을 넘어 방사형 모델을 택할 경우에도 안보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개념의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보편적인 개념을 상정해야 하며, 그로부터 다양한 특수 사례들을 상정할 수 있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이나 확대된 안보개념 모두 이러한 보편 개념의 부분집합일 따름이다. 이렇게 볼 경우 안보개념의 확대는 이론적으로 무리한 개념의 왜곡이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통합적 개념 하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사례들의 개념 설정 작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의 도입부에서 제기한 두 가지의 퍼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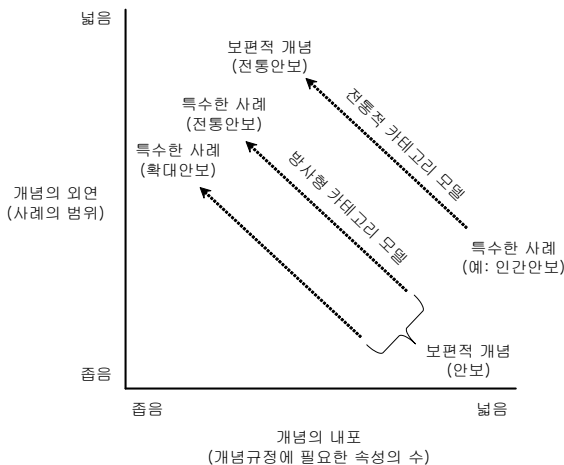


그림 9. 안보개념의 확대와 경합성

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탈냉전 시기의 안보개념 확대는 무리한 개념 왜곡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우리는 전통적인 카테고리가 아닌 방사형 카테고리의 모델을 상정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개념의 수준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불명확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탈냉전기의 확대된 안보개념으로 인하여 안보개념 자체에 본질적인 경합성이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판단 역시 개념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사형 카테고리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 하에서 우리는 보편적 개념의 핵심내용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개념의 서로 다른 속성이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가 특정한 사회현상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사회과학은 언제나 자연과학이 지닌 엄밀성과 객관성을 지향해왔다. 비록 자연과학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사회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의 기저에서는 인식론적 차이를 배경으로 한 치열한 방법론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나의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철학적 논쟁이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 시도하고 있는 안보개념의 왜곡 및 ECC 여부에 대한 검토 역시 이러한 학문적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특정한 개념이 원래 사용되던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사례들을 포함하는 경우 이론적인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논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준으로서 사르트리는 “추상성의 사다리”라는 관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대부분의 사회과학 개념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가 과연 무리한 개념 왜곡인지, 그리고 이 개념 자체가 본질적인 경합성을 띠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사르토리의 엄격한 기준과 전통적 카테고리 모델을 그래도 적용하기보다 방사형 카테고리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카테고리 모델에 따르면 탈냉전기에 시도되었던 안보개념의 확대는 개념의 왜곡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어떤 카테고리를 택하는가에 따라 해답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안보개념 자체가 하나의 ECC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물론 “생존”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속성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나아가 어떤 카테고리 모델을 택하는가에 따라 경합성이 완전하게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작업은 안보개념을 둘러싼 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회과학의 개념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Baldwin, David A. 1996. “Security Studie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orld Politics* 48(1). pp. 117-141.
- Baldwin, David A. 1997. “The Concept of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 pp. 5-26.
- Barabási, Albert-Lászlo.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강병남·김기훈 옮김. 『링크: 21세기를 지배하는 네트워크 과학』. 서울: 동아시아.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eck, Ulrich. 2002. “The Cosmopolitan Society and Its Enemie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1-2). pp. 17-44.
- Buchanan, Mark. 2003. *Nexus: Small Worlds and the Groundbreaking Theory of Networks*. 강수정 옮김. 『넥서스: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서울: 세종연구원.
- Bull, Hedley. 1968. “Strategic Studies and Its Critics.” *World Politics* 20(4). pp. 593-605.
- Buzan, Barry. 1991.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2nd e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Buzan, Barry. 1997.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1). pp. 5-28.
- Buzan, Barry. 1998.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1). pp. 5-28.
- Cerny, Philip G. 2000. "The New Security Dilemma: Divisibility, Defection and Disorder in the Global Er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6. pp. 623-646.
- Checkel, Jeffrey T. 1998.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50(2). pp. 324-348.
- Chipman, John. 1992. "The Future of Strategic Studies: Beyond Grand Strategy." *Survival* 34(1). pp. 109-131.
- Collier, David and James E. Mahon. 1993. "Conceptual 'Stretching' Revisited: Adaptive Categories in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4). pp. 845-855.
- Crawford, Neta C. 1991. "Once and Future Security Studies." *Security Studies* 1(2). pp. 283-316.
- Eriksson, Johan. 1999. "Observers or Advocates? On the Political Role of Security Analysts." *Cooperation and Conflict* 34(3). pp. 311-330.
- Farrell, Theo. 2002. "Constructivist Security Studies: Portrait of a Research Program."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1). pp. 49-72.
- Gallie, W. B. 1956.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56. pp. 167-198.
- Gray, Colin S. 1992. "New Directions for Strategic Studies: ㄱ Can Theory Help Practice?" *Security Studies* 1(4). pp. 610-635.
- Gray, John N. 1977. "On the Contestability of Some Social and Political Concepts." *Political Theory* 5. pp. 330-348.
- Haftendorn, Helga. 1991. "The Security Puzzle: Theory-Building and Discipline-Building in Inter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1), pp. 3-17.
- Hirschman, Albert O. 1978. "Exit, Voice, and the State." *World Politics* 31(1). pp. 90-107
- Hopf, Ted. 1998.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1). pp. 171-200
- Huysmans, Jef. 2002. "Defining Social Constructivism in Security Studies: The Normative Dilemma of Writing Security." *Alternatives* 27. pp. 41-62.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Knudsen, Olav F. 2001. "Post-Copenhagen Security Studies: Desecuritizing Securitization." *Security Dialogue* 32(3). pp. 355-368.

- Krause, Keith. 1998. "Critical Theory and Security Studies: The Research Programme of 'Critical Security Studies'." *Cooperation and Conflict* 33(3). pp. 298-333.
- Krause, Keith and Michael C. Williams. 1996. "Broadening the Agenda of Security Studies: Politics and Methods."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40. pp. 229-254.
- MacIntyre, Alasdair. 1973. "The Essential Contestability of Some Social Concepts." *Ethics* 84. pp. 1-9.
- Mathews, Jessica. 1989. "Redefining Security." *Foreign Affairs* 68(2). pp. 163-177.
- Nye, Joseph S., Jr. and Lynn-Jones, Sean M. 1988.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12(4). pp. 5-27.
- Rosenau, James N. 1990.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au, James N. 2003.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tori, Giovanni. 1970.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pp. 1033-1053.
- Smith, Kenneth. 2002. "Mutually Contested Concepts and Their Standard General Use." *Journal of Classical Sociology* 2(3). pp. 329-343.
- Stritzel, Holger. 2007. "Towards a Theory of Securitization: Copenhagen and Beyond."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3(3). pp. 357-383.
- Swanton, Christine. 1985. "On the 'Essentially Contestedness' of Political Concepts." *Ethics* 95. pp. 81-827.
- Waever, Ole. 1995. "Identity, Integration and Security: Solving the Sovereignty Puzzle in E.U. Studie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48(2). pp. 389-431.
- Waever, Ole. 1996. "European Security Ident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4(1). pp. 103-132.
- Walt, Stephen M. 1991.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2). pp. 211-239.
- Watts, Duncan J. 2004. *Six Degrees*. 강수정 옮김. Small World. 서울: 세종연구원.
- Wendt, Alexander. 1995.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20(1). pp. 71-81.
- Wittgenstein, Ludwig. 196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3rd ed. London: Basil Blackwell.

## Essentially Contested or Stretched?: Evaluating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Byoung Won Mi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is research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extension of the concept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in terms of its conceptual dimension. The concept of security suggested by the Copenhagen school based upon the European experience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research which investigates its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Many social scientists have given warnings on the over-extension of the concept of security. This has led to uncompromising arguments over the essential nature of security. This study seeks to find its meaning through two puzzles. First, does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lead to a stretching of concept away from its essential nature? Second, is the concept of security a kind of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among many perspectives? Answering these two puzzles requires the evaluation of theoretical contributions of the theoretical works regarding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As such, this study discusses theoretical frameworks of conceptual stretching and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in the philosophical context of social sciences,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of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upon these theoretical frameworks.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any conceptual stretching, under the condition that we take a radial category rather than a conventional category of concepts which reflects the ambiguous boundaries among different levels of concepts. Another conclusion is that the extended concept of security does not cause a contention over the

essentially contested nature of the concept, upon the same condition. The condition in these results pushes us to acknowledge that the core contents of any universal concept may change over periods and contexts. In other words, the core of a concept is not fixed at all. This leads us to learn the significance of dimensions that we underline among many social phenomena we study.

**Keywords:**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Copenhagen school, conceptual stretching, extension, intensio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the ladder of abstraction, radial category